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6. 22. / (총 13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정 혜 은 윤 동 빈	전 화	044-202-3575 044-202-3576
서울특별시 질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김 정 일 정 진 숙		02-2133-7660 02-2133-7669
대전광역시 위생안전과	과 장 담 당 자	원 방 연 김 혜 경		042-270-4860 042-270-4900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윤 덕 희 최 문 갑		031-8008-5420 031-8008-5422
중앙사고수습본부 인력관리팀	팀 장 담 당 자	이 영 재 김 정 열		044-202-3725 044-202-3338
중앙사고수습본부 물자관리팀	팀 장 담 당 자	정 영 훈 이 병 희		044-202-3740 044-202-3742
중앙사고수습본부 선별진료검사팀	팀 장 담 당 자	이 윤 신 김 소 연		044-202-3425 044-202-348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대응 상황, ▲하절기 대응 의료인력
근무 피로도 경감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대응 상황, ▲하절기 대응 의료인력 근무 피로도 경감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수도권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대전, 충남, 전북 등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서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유입환자도 증가하고 있어, 지역감염과 해외유입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위기상황이라고 강조하며,
-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험시설을 사전에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더위 속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국민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일상 생활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6월 7일(일)부터 6월 20일(토)까지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신규 확진환자 수가 46.7명으로 이전 2주간(5. 24.~6. 6.)의 39.6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 또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의 비율도 종전 8.1%에서 10.6%로 상승하였고,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은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5월 24일 ~ 6월 6일	6월 7일 ~ 6월 20일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9.6명	46.7명
지역사회	33.6명	36.8명
집단 발생 ¹⁾ (신규 기준)	17건	12건
감염 경로 불명 비율	8.51% (45/554)	10.6% (69/654)
방역망 내 관리 비율 ²⁾	80% 미만	80% 미만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의 급격한 유행 확산은 억제하고 있으나, 방역당국의 추적이 유행 확산을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 특히 수도권 이외에 충청권, 전북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새로운 위험 요인이며,
- 확진환자 발생 연령도 높아지고 있어, 6월 3주에는 확진자 중 절반이 50대 이상으로 중증 환자가 증가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 확진자 중 50대 이상 비율 5월 2주 11.7% → 6월 3주 50% (약 5배 증가),
위중·중증 환자 6월 2일 8명 → 6월 20일 현재 34명 (약 4배 증가)

2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대응 상황

- ☐ 수도권의 각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자체적인 방역 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에 대해 접촉자 전수 검사 및 자가격리 등 긴급방역조치를 하고, 코인노래연습장 등 총 2,545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이행상황을 현장점검 하였다.

* (도봉구 요양시설) 총 211명 검사(양성 28, 음성 183명),
(관악구 방문판매시설) 총 956명 검사(양성 39명, 음성 795명, 검사 중 122명)

-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6월 19일(금)부터 21일(일)까지 3일간 종교·문화·체육·관광시설 4,529개소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과 시설별 필요 사항을 지도·지원했다.

- 점검 결과 고위험 체육시설인 GX를 일부 자체 폐쇄하도록 하였으며, 필라테스·탁구장 등 체육시설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지도하였다.

-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는 6월 20일(토)부터 7월 5일(일)까지 도서관, 체육시설, 공연장과 같은 공공이용시설을 잠정 폐쇄하고, 확진자 동선에 있는 시설 방문자 모두에 대해 무료검사를 실시 중이다.

- 또한 오늘부터 7월 5일까지 미신고·무등록 방문판매업체 등 지역 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 807개소에 대해 시·자치구·경찰이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 지난 주말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 약 2만 6000개소를 점검하여, 1,664건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고, 심야시간 유흥시설 특별점검을 통해 현재까지 99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고발 조치 하였다.

- 관계부처에서도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학생 약 14만 명과 교직원 약 1만 4000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였다.

○ 또한 6월 22일 현재 **12개의 학교가** 등교 수업을 중단하는 등 학교 내 방역 관리 및 전파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서울 2개교, 인천 4개교, 경기 5개교, 전북 1개교(6.19. 18시 조사 기준)

□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격리시설** 등에 의료인력 등 총 500명을 지원하고 있다.

○ 지원 인력은 의료인력 및 행정운영 등 지원인력을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간호사 53명, 그 외 방역·소독·운영 인력 등 447명**을 지원 중이다.

(6. 21. 16시 기준)

구분	의료인력			지원인력					총계
	의사	간호사	소계	임시 생활시설	방역 / 소독	생활치료 센터운영	격리시설 등 기타	소계	
현원(명)	21	32	53	94	0	23	330	447	500

* 연인원(1.27.~6.21.)은 총 221,889명 (의료인력 : 30,805명 / 지원인력 191,084명)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콜센터, 육가공업 등과 같이 노동자가 밀집해 있는 사업장 500개소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 중이다.

○ 또한 대규모 제조업, 에어컨 등 가전제품 출장 수리업 등 고위험 사업장 200개소를 발굴하여 현장지도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코로나19 긴급대응 협의체*」를 통하여 취약사업장 동향 파악 및 지침 홍보·전파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지방노동관서·안전보건공단·근로자건강센터·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구성

□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 경찰청에 따르면 어제(6월 21일) 하루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5건(5명)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

- 현재까지 누적으로 총 551건(940명)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 306건(408명)을 기소(구속 7명)하였고 243건(523명)은 수사 중(구속 2명)이다.

< 감염병예방법 위반 불법행위 수사 현황 (6월 15일 기준) >

구 분	수사 중		사건 송치			구속	
	착수	누계	일계	기소	불기소	일계	누계
격리조치 위반	2건(2명)	151건(164명)	-	251건(269명)	-	-	6명
방역조치 위반	-	1건(1명)	-	2건(10명)	2명	-	-
역학조사 방해	-	13건(24명)	-	6건(8명)	-	-	3명
집회금지 위반 등	-	12건(47명)	-	12건(54명)	6명	-	-
집합금지 위반	3건(3명)	66건(287명)	-	35건(67명)	-	-	-
입원 거부	-	-	-	-	1건(1명)	-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에서는 인터넷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과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동선 정보 게시물을 탐지하여 삭제를 진행 중이다.

- 6월 19일까지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을 총 974건을 탐지하여 954건을 삭제 조치하였으며, 공개 목적을 상실한 동선 정보 1,396건을 탐지하여 1,145건을 삭제 조치하였다.

< 개인정보 및 동선정보 탐지·삭제 건수 >

구분(누계)	탐지	삭제	요청 중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 (2.1~6.19)	974	954	20
동선정보 노출 게시물(5.4~6.19)	1,396	1,145	251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코로나19 관련 환자 등의 이송을 지원하고 있다.

○ 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환자 10,450명과 의심 환자 39,503명 등 총 51,567명의 이송을 지원하였다.

< 환자 등 이송현황 (6월 22일 0시 기준, 단위: 명) >

구 분	총 계	확진환자	의심환자	병원전원	검체수송(건)
누 계	51,567	10,450	39,503	753	861

○ 아울러 해외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유증상자 등을 병원 및 시설로의 이송 역시 지원하고 있는데, 3월 19일부터 확진자 병원이송 351건을 포함하여 총 2,986건의 이송을 진행하였다.

< 입국자 이송현황 (6월 22일 0시 기준, 단위 : 건, 명) >

구 분	총 계		임시대기시설*		확진자 병원이송		대기해제	
누 계	2,986건	24,652명	1,485건	12,927명	351건	381명	1,150건	11,344명

* 공항입구 → 검역소 → 임시대기시설

3 하절기 대응 의료인력 근무 피로도 경감 방안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더운 날씨에 선별진료소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하절기 근무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였다.

○ 우선 파견인력의 기본 근무 기간을 당초 1개월에서 1주일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 운영자 재량에 따라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또한 선별진료소 등 야외 근무 인력에 대해서는 폭염 시간대를 고려해 별도의 근무 시간 기준 및 휴식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6.10~)이다.

○ 또한 업무가 폭증한 지역의 경우 간호인력 등 중앙사고수습본부 모집인력*의 최대 1/3 이내에서 기존 근무인력에 대한 교대인력을 지원하며,

* 6.16. 기준 간호사 2,545명, 간호조무사 792명 모집

-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시설별 기존 인력 현황 및 근무 여건, 입원환자와 검체 채취수요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예정이다.

○ 아울러 착·탈의가 용이하고 통기성이 높은 수술용가운세트*를 추가 배포**하여 의료인력의 선택범위를 확대하였다.

* 수술용가운, 페이스실드, N95마스크, 장갑

** 약 10만개 배포(6.10), 6~9월까지 매월 20만개 배포하면서 추가 물량확보(총 50만개) 추진

- 또한 외부 선별진료소를 대상으로 냉각조끼(아이스쿨러)를 배포 중*이며, 냉방기 설치도 지원하고 있다.

* 기확보 물량 우선 배포(422개, 6월 3주), 추가 물량(1,000개) 국내 도입 추진 중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위와 같이 개선된 근무여건 마련을 위해 6월 말까지 파견인력 근무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며, 각 시·도에 대해 시설별 교대 인력 지원 수요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4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21일(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교시설 3,315개소, ▲유흥시설 1,083개소 등 40개 분야 총 11,577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작성 미흡 등 832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 울산에서는 종교시설 35개소, 유흥시설 18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12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전북에서는 유흥시설 195개소를 점검하여 마이크 덮개 미사용 등 41건에 대해 행정지도 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13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소비자위생 감시원이 합동(90개반, 277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172개소가 영업 중지, 960개소가 영업중인 것을 확인하였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21일(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4,97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8,35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628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92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6.21)는 운동을 이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확인하였으며 계도조치하였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7개소 2,741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43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6월 21일) 입소 197명, 퇴소 181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36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하여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 사회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5.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마스크 착용법
 8.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9.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수칙 리플릿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